

여의도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 한국 보육의 미래

| 일시 | 2011년 11월 4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 회** 임 해 규 국회의원(한나라당)  
**개 회 사** 정 두 언 소장(국회의원/한나라당)  
**발 표** 안 선 회 교수(고려대)  
**지정토론** 박 숙 자 원장(보육진흥원)  
유 희 정 본부장(여성정책연구원)  
이 재 용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목 차

## 발표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 ..... 1  
안 선 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지정토론 1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 37  
박 속 자 한국보육진흥원장

## 지정토론 2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 43  
유 희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지정토론 3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 51  
이 재 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개 회 사



정 두 언  
여의도연구소장

11월 1일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저출산·고령화가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1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86개국 가운데 18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 역시 현재는 11%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이 되면 38%의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성장 동력의 쇠퇴로 이어지고, 노인인구 부양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거의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현재 평균 60%에 도달한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가계당 소비지출 비중에서 자녀 양육에 평균 30%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더 이상 자녀 양육은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에 상응하여 정부에서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시작으로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보육 지원 대상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 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양육수당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고,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의 수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등 개선되어야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무상보육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육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한국에서 보육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보육의 미래’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구체적인 보육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1월 4일

여의도연구소장 **정 두 언**

• 발 표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

안 선 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 발제문은 여의도연구소의 뉴비전(2011)의 정책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이 발제문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책내용을 제시하기보다 영·유아를 위한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I. 서언 :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바란다

### 1. 올바른 정치란

- 정치란 “희소가치의 현실적인 분배 방식을 규명한 후, 이상적인 분배방식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김기우 외, 2001)
  - 올바른 정치는 희소가치의 현실적인 분배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분배방식을 개선시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인간의 노력을 포함해야 함
- 문제제기 :
  - 한국 정치는, 한나라당은 이상적인 분배방식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 한국 정치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 2.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세대별 투표 현황(방송3사 출구조사)

- 20대 : 박원순 후보 69.3%,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30.1% (2배 이상)
- 30대 : 박원순 후보 75.8%,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23.8% (3배 이상)
- 40대 : 박원순 후보 66.8%,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32.9% (2배 이상)
- **20대, 30대, 40대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함**

### 3. 20대, 30대, 40대 정치에서 실망하고,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다

- 20대, 30대, 40대의 세상살이 : 인생이 불안과 고통의 연속, 재벌·고소득층은 사돈의 팔촌까지 잘나가고, 서민의 고통은 외면한다고 인식
- 20대, 30대, 40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권에 대한 부정·비판하고 있음
- 20대, 30대, 40대가 자신들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음

4. 20대, 30대, 40대의 정치에 대한 요구(교육 분야) : 문제는 보육·교육

- 20대 : 반값등록금에 대한 약속 이행, 진로 맞춤형 대학교육 혁신
- 30대 : 출산, 양육, 보육,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요구
- 40대 :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대학생 반값등록금

5. 절실하고 소박한 30대의 자녀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무상지원을 국가가 책임져 달라
- 질 높은 영·유아 공보육, 공교육 체제를 구축해 달라
- 우리 집 가까운 곳에 훌륭한 보육·교육 시설을 마련해 달라

## II.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

1. 저출산과 학령인구 저하 경향

- 지난 10여 년간의 출산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가, 2007년 1.25명으로 일시적 상승을 보인 후 다시 하강
  - 국제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가장 낮은 수준임

〈표 1〉 연도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출산율 <sup>1)</sup>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2

1)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수치이며, 2010년의 수치는 잠정 수치임

〈표 2〉 2010년도 외국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국가	미국	프랑스	호주	중국	독일	일본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07	1.87	1.85	1.77	1.33	1.26	2.52

※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11), 유아교육·보육 주요 통계, p.4~5

○ 학생수 감소 : 전년 대비 연간 **221,338명(2.8%) 감소**

- **학생수는** 총 7,601,544명으로 ‘10년 대비 **221,338명(2.8%)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 교육통계조사 이래 가장 높은 감소 비율을 보임
- 유치원생은 565,034명으로 ‘10년 대비 26,447명(4.9%) 증가
- 초등학생은 3,132,477명으로 ‘10년 대비 166,617명(5.1%) 감소
- 중학생은 1,910,572명으로 ‘10년 대비 64,226명(3.3%) 감소
- 고등학생은 1,943,804명으로 ‘10년 대비 18,552명(0.9%) 감소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취학적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임

\* 대학교 재적학생수는 총 3,735,707명, ‘10년 대비 91,549명 2.5% 증가

〈표 3〉 유·초·중등학교 학생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연도	전체 학생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고	특성 학교	특목고	자율고	일반계	전문계	
2011	7,601,544	565,034	3,132,477	1,910,572	1,943,804	1,351,025	415,398	61,685	115,696	-	-	49,657
2010	7,822,882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	-	-	-	1,496,227	466,129	48,047
2009	8,031,964	537,361	3,474,395	2,006,972	1,965,792	-	-	-	-	1,484,966	480,826	47,444
2008	8,202,037	537,822	3,672,207	2,038,611	1,906,978	-	-	-	-	1,419,486	487,492	46,419
2007	8,324,217	541,550	3,829,998	2,063,159	1,841,374	-	-	-	-	1,347,363	494,011	48,136
2006	8,368,339	545,812	3,925,043	2,075,311	1,775,857	-	-	-	-	1,281,508	494,349	46,316
2005	8,384,506	541,603	4,022,801	2,010,704	1,762,896	-	-	-	-	1,259,792	503,104	46,502
2004	8,384,228	541,713	4,116,195	1,933,543	1,746,560	-	-	-	-	1,232,010	514,550	46,217
2003	8,393,187	546,531	4,175,626	1,854,641	1,766,529	-	-	-	-	1,224,452	542,077	49,860
2002	8,375,732	550,256	4,138,366	1,841,030	1,795,509	-	-	-	-	1,220,146	575,363	50,571
2001	8,429,024	545,142	4,089,429	1,831,152	1,911,173	-	-	-	-	1,259,975	651,198	52,128
2000	8,549,865	545,263	4,019,991	1,860,539	2,071,468	-	-	-	-	1,324,482	746,986	52,604
1990	9,965,954	414,532	4,868,520	2,275,751	2,283,806	-	-	-	-	1,473,155	810,651	123,345
1980	10,044,891	66,433	5,658,002	2,471,997	1,696,792	-	-	-	-	932,605	764,187	151,667
1970	7,793,585	22,271	5,749,301	1,318,808	590,382	-	-	-	-	315,367	275,015	112,823
1962	5,189,214	17,215	4,089,152	655,123	323,594	-	-	-	-	199,253	124,341	104,130

주 :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중, 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포함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1011081 ).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p8.

## - 0~19세 연령별(전국) 추계인구를 고려할 때, 향후

〈표 4〉 0~19세 연령별(전국) 추계인구<sup>2)</sup> (2008~2010년)

(단위: 명)	2008년		2009년		2010년	
	추계인구	추계인구 (여)	추계인구	추계인구 (여)	추계인구	추계인구 (여)
총계	11,734,759	5,567,107	11,530,732	5,475,637	11,309,174	5,379,113
0~7세	3,858,723	1,852,584	3,705,358	1,780,666	3,609,514	1,736,763
0세	446,738	215,019	443,017	213,397	438,169	211,217
1세	445,796	214,447	443,528	213,529	439,839	211,921
2세	438,576	211,297	444,718	213,939	442,457	213,024
3세	448,625	216,166	437,813	210,940	443,947	213,579
4세	475,449	228,410	447,843	215,814	437,053	210,598
5세	489,413	234,389	474,578	227,992	447,025	215,420
6세	526,480	251,605	488,368	233,903	473,567	227,520
7세	587,646	281,251	525,493	251,152	487,457	233,484
8~13세	3,900,861	1,850,597	3,784,881	1,802,696	3,622,496	1,729,649
8세	618,004	294,907	586,352	280,654	524,339	250,620
9세	616,016	292,785	616,480	294,186	584,910	279,969
10세	635,360	303,771	614,146	291,956	614,613	293,355
11세	659,297	314,640	633,166	302,771	612,031	290,997
12세	679,424	320,321	657,269	313,712	631,223	301,880
13세	692,760	324,173	677,468	319,417	655,380	312,828
14~16세	2,075,990	971,776	2,078,115	971,075	2,053,670	962,433
14세	698,514	325,453	690,127	322,997	674,898	318,260
15세	696,402	325,622	695,523	324,151	687,177	321,707
16세	681,074	320,701	692,465	323,927	691,595	322,466
17~19세	1,899,185	892,150	1,962,378	921,200	2,023,494	950,268
17세	654,960	307,746	679,143	319,846	690,506	323,065
18세	629,360	294,013	654,964	307,777	679,151	319,880
19세	614,865	290,391	628,271	293,577	653,837	307,323

※ 출처: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자료

2) 통계청에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별 실적자료 추이를 반영하여 2006년 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결과임

〈표 5〉 2011-2020 초등 학생수 예측 내역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학생수	3,124,305	2,951,126	2,865,011	2,836,813	2,789,408	2,787,663	2,776,964	2,745,449	2,689,684	2,593,204
국·공립 학생수	3,081,795	2,890,067	2,823,692	2,794,692	2,746,767	2,743,790	2,731,968	2,699,649	2,614,005	2,547,351
'교사 1인당 학생수' 변화*	22.10	20.73	20.25	20.04	19.70	19.68	19.59	19.36	18.75	18.27

- \* 국·공립 초등학교사 정원(139,448명) 유지시 '교사 1인당 학생수' 변화, OECD 국가 평균 16.4명('08년)
- \* 가장 최근의 추정치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의 2020년 전망치(256만)보다 크게 나타남. 2006년 이후 출산률 저하를 반영하지 못한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전망치(262만)보다는 작음.

〈표 6〉 2011-2020 중등 학생수 예측 내역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학생수	3,805,372	3,734,421	3,592,733	3,409,713	3,236,444	3,078,459	2,906,125	2,729,234	2,671,099	2,647,787
국·공립 학생수	2,616,608	2,585,254	2,500,727	2,380,205	2,239,003	2,139,721	2,066,365	1,951,595	1,931,513	1,934,108
'교사 1인당 학생수' 변화*	19.27	19.04	18.42	17.53	16.64	15.91	15.15	14.37	14.23	14.25

- \* 국·공립 중등교사 정원(135,764명) 유지시 '교사 1인당 학생수' 변화, OECD 국가 평균 :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08년 자료)
- \* 가장 최근의 추정치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의 2020년 전망치(252만)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의 출산 증가를 반영. 2006년 이후 출산률 저하를 반영하지 못한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전망치(270만)보다는 작음.

\* 출처 : 이영 외(2011). 장래 학생수 추정과 교원수급정책 방향. 2012-2020년 중장기 교원수급전망 세미나 자료집.

- 향후 학생수 감소 추이 : 향후 10년 간 연평균 19만 3808명 감소 추정

〈표 7〉 2011-2020 초·중등 전체학생수와 연간 감소 학생수 예측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감소 학생수
초중등 학생수	6,929,677	6,665,547	6,457,744	6,246,526	6,025,849	5,866,122	5,683,089	5,474,683	5,330,783	5,240,991	
감소 학생수	249,395	264,130	207,800	211,218	220,677	159,727	183,033	208,406	143,900	89,792	193,808

- 향후 교육발전을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조건 형성

## 2.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 과거(1990년, 2000년)와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특히 25~29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8〉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990~2008) (단위: %)

연령	1990	1995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2008
20~24세	64.6	66.1	...	60.8	61.5	62.4	61.5	62.5	62.6	...	54.6
25~29세	42.6	47.8	...	55.9	57.7	59.4	60.5	63.7	66.1	...	69.3
30~34세	49.5	47.5	...	48.5	48.8	49.8	49.8	50.3	50.3	...	53.3
35~39세	57.9	59.2	...	59.1	59.5	59.3	58.2	58.8	59.0	...	58.5
40~44세	60.7	66.0	...	63.4	63.4	63.8	64.0	65.4	65.6	...	65.9
45~49세	63.9	61.1	...	64.6	64.2	64.0	61.5	62.6	63.1	...	65.8

※ 출처: 유구종·조희정(2009), 영·유아교육개론, 공동체, p.62

○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적자원 고갈과 부양 부담 급증으로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동력 상실 우려(여성가족부, 2011)**

〈표 9〉 OECD 주요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구 분	한국	OECD평균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미국	일본
전 체	53.9	61.3	77.3	76.5	70.1	69	62.9
대졸자	62.6	82.4	91.2	90.3	82.1	80.7	67.9

## 3. 국가 차원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

□ 주요 선진국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유아단계의 교육적 준비가 이후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포함시키고, 가정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음

\* 예컨대, 영국은 유아교육비의 96% 정도를, 그리고 미국은 60%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꾸준히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차성현, 2011)

- 선진국에서는 유아교육·보육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본격 투자 확대 중
  - 대부분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 간 중복된 기능을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연령별로 이원화하여 조정함
  - 단일부처로 통합한 경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로 통합하는 국가가 복지 분야 부처로 통합하는 국가보다 많음

〈표 10〉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제

구분		국가명	담당 부처	담당연령(세)
일원화 체제	통합 체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교육부	0~6
		핀란드	복지부	
이원화 체제	연령별 분리 체제	대만, 독일, 싱가포르, 이태리, 프랑스, 홍콩,	교육부	3(2)~5(6)
			복지부	2(3)
	병행 중복 체제	일본, 한국	교육부	3~5
			복지부	0~5
		미국(주에 따라 차이)	교육부	5
교육부&복지부	0~4			

\* 출처: OECD (2006). *Start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France: OECD.  
 European Commission (2009). *The structure of European education systems 2009/10: Schematic diagrams*.

\* 신은수 외(2009).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요구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재인용.

□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 실태

-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도 기준 유아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5% 수준

〈표 11〉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2007년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구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3,909 (71.8%)	5,437 (80.7%)	7,860 (95.1%)	8,920 (69.1%)
OECD 평균	5,447	6,741	8,267	12,90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 OECD 교육지표

- 초·중등교육 부문에 비해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음

○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GDP 대비 0.11% 수준이며, 정부의 유아교육비 부담률은 46.3%로 OECD 평균 80.7%에 비해 낮은 편임

〈표 12〉 교육단계별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2007년도)

구분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정부재원	민간재원			정부재원	민간재원		
		가계지출	기타민간 기관지출	총합		가계지출	기타민간 기관지출	총합
한국	49.7	47.7	2.6	50.3	77.8	20.1	2.1	22.2
OECD 평균	79.7	-	-	20.3	90.3	-	-	9.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 OECD 교육지표



〈표 13〉 OECD국가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에 대한 공공지출

유아교육과 보호 체제 유형	국가	유아교육 단계			초중등교육 단계			
		보육	유아 교육	전체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전체
노르딕형	노르웨이	0.5	0.3	0.8	1.8	2.3	2.3	6.4
	덴마크	0.7	0.5	1.2	1.9	3.0	2.4	7.3
	아일랜드	0.7	0.5	1.2	2.7	2.6	1.5	6.7
	핀란드	0.7	0.2	0.9	1.3	2.6	2.0	6.0
	스웨덴	0.6	0.4	1.0	1.8	2.7	1.9	6.4
자유형	뉴질랜드	0.1	0.6	0.7	1.5	2.8	1.5	5.8
	미국	0.1	0.3	0.4	1.7	1.8	1.3	4.8
	영국	0.4	0.2	0.6	1.4	2.4	1.2	4.9
	캐나다		0.2	0.2	0.0	2.7	1.5	4.2
자유표방형	호주	0.2	0.2	0.4	1.5	1.8	1.1	4.4
	네덜란드	0.1	0.4	0.5	1.4	2.1	1.4	4.8
	스위스	0.1	0.1	0.2	1.7	2.2	1.5	5.4
	오스트리아	0.3		0.3	1.0	2.5	1.5	5.0
	일본	0.2	0.1	0.3	1.2	1.3	0.6	3.2
	체코	0.1	0.3	0.5	0.6	2.2	0.9	3.7
유럽대륙형	포르투갈	0.0	0.4	0.4	1.7	2.2	1.0	4.8
	독일	0.1	0.3	0.4	0.7	2.3	1.1	4.1
	멕시코	0.0	0.6	0.6	2.2	1.7	1.0	4.8
	벨기에	0.2	0.6	0.8	1.4	2.6	1.3	5.3
	스페인	0.4	0.0	0.4	1.1	1.7	0.9	3.7
	이탈리아	0.2	0.5	0.6	1.1	2.1	0.8	4.0
	프랑스	0.4	0.6	1.0	1.1	2.7	1.2	5.0
	한국	0.1	0.1	0.2	1.6	1.8	0.6	4.0
OECD 국가 평균		0.1	0.6	0.7	1.1	2.4	1.0	4.5
OECD 국가 평균		0.3	0.3	0.5	1.4	2.2	1.2	4.8

\* 출처: OECD (2009c).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신은수 외(2009).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요구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재인용.

#### 4. 중산층 서민의 영·유아 교육비 부담 증가

□ 저출산, 자녀양육 비용 부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 영·유아 자녀 한 명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A)은 소비지출(C) 대비 30% 전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영·유아 개인별·연령별(0~6세) 양육비 산출 결과<sup>3)</sup>

(단위: 천원, %)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가구소득(B)	3,298	4,178	3,686	3,140	3,351	5,358	3,546
소비지출(C)	2,598	2,643	2,844	2,592	2,933	3,079	3,464
총양육비(A)	942	768	824	736	893	936	872
자녀 고유	693	404	399	375	552	523	322
가족 공동	249	364	425	361	341	413	550
비율(A/B)	32.7	23.5	26.4	26.4	27.8	24.8	26.2
비율(A/C)	35.2	28.7	30.1	28.1	31.5	30.6	25.3

※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p.114

○ 만3세~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아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육비로 **가구당 월평균 32만 8천원 정도 지출**(차성현, 2011)

〈표 15〉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 추세

년도	1992 (우남희외)	1997년 (신진)	1999년 (곽수란외)	2001년 (박수진)	2007년 (김보림외)
사교육비	8만4천	12만6천	16만5천	23만	24만6천

\* 출처: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2). 사실학원 및 가정 중심의 조기 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곽수란, 이유미(1999). 사교육 교육성에 관한 연구. 나주대학논문집, 4, 161-172.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보림, 엄정애(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신은수 외(2009).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요구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3) 제시한 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조사 결과로, 표본으로 선정된 247가구의 1개월 동안 작성한 가계부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표 16〉 2009년 지역별 영·유아 영어학원비

단위: 천원

	서울		대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소도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년 학원비	9,605	19,980	6,771	10,680	6,029	12,120	7,468	19,980
월 학원비	800	1,665	564	890	502	1,010	622	1,66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내부자료(2009. 9. 28 기준) 재구성.

- 유아교육비의 가계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교육비에 대해 67.9%,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59.3%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
- 부모의 42.7%가 유아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자녀의 추가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자녀출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차성현, 2011)
- 유아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및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일차적으로 유아단계의 교육을 완전히 공교육화 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차성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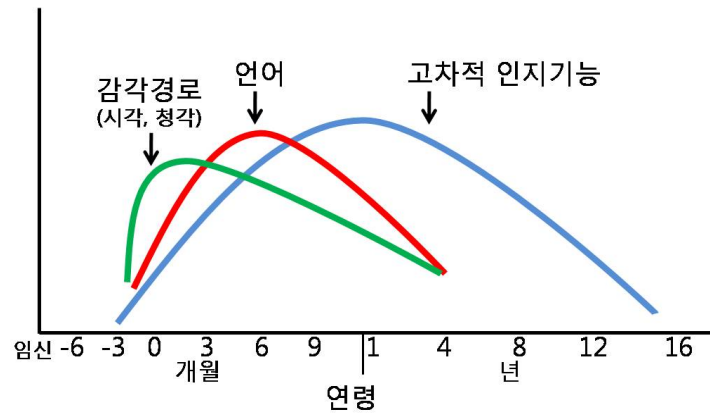
#### 5. 중산층 서민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신은수 외, 2009)

- 한국교육개발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91%가 유아 공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 학부모의 78% 정도가 유아 공교육기관의 기본학제 포함 의견, 학부모의 88% 정도가 유아 공교육기관의 유아학교 명칭 필요하다고 응답
- 학부모의 94% 정도가 유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에 찬성
  - 유아 완전 무상교육에 대한 요구는 거주지역,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족 소득에 차이가 없이 학부모의 94% 정도가 찬성
- 학부모들은 대체로 균업면(농산어촌), 저소득층 우선 지원에 찬성

## 6.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 ○ 영·유아가 가장 학습력이 뛰어난 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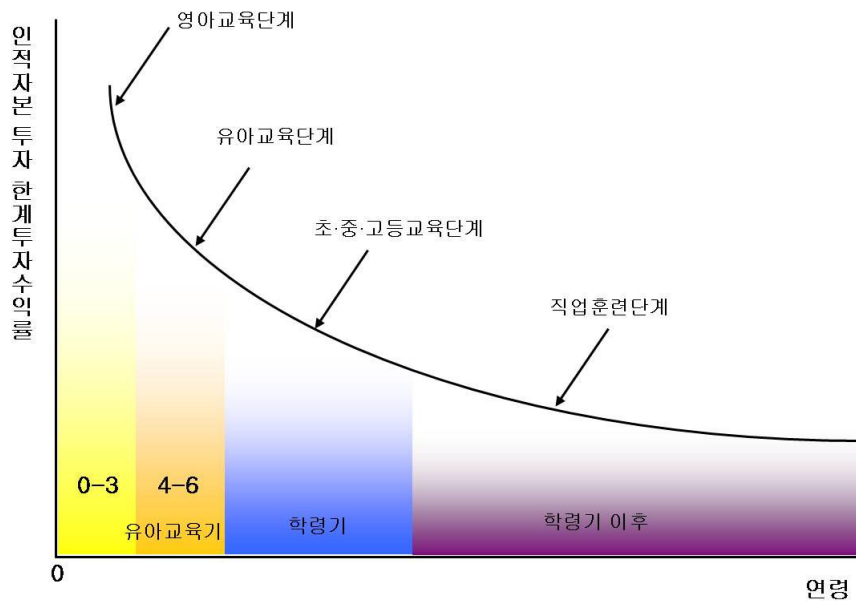
- 만 0~1세 사이에 인지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언어가 그 발달의 정점을 그리며, 3세 미만에 이미 고차적인 인지기능의 상당 부분이 발달



[그림 1] 인간의 뇌발달

\* 출처: Charles A. Nelson(2000), In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188 재인용

### ○ 유아기 투자가 인적 자원 형성에 가장 효과적(James Heckman, 2004)



[그림 2] 연령에 따른 인적 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

\* 출처: James Heckman, 2004; Edward Melhuish, 2007; 이경희 외, 2009 재인용

○ 생애 초기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킴(교육과학기술부, 2011)

※ 유아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영어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각각 8.39점, 11.66점 낮은 성취도를 보임(류한구 외, '05)

○ 만 5세아만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학습지원이 필요

### Ⅲ.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sup>4)</sup>

#### 1. 영·유아 수<sup>5)</sup>

〈유치원 취원아 수〉 (단위: 명)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단위: 명)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	550,256	541,713	545,812	537,822	538,587	전체	800,991	930,252	1,040,361	1,091,287	1,175,049
국립	267	268	253	249	236	국공립	103,351	107,335	114,657	122,919	129,656
공립	119,301	123,638	121,071	118,879	126,341	법인	142,035	135,531	120,551	114,629	112,338
사립	430,688	417,807	424,488	418,694	412,010	민간	455,936	555,812	641,137	651,273	675,763
-2002년 대비 약 2% 감소함						직장	8,730	11,787	14,538	16,479	18,794
-국립과 사립의 취원아 수는 감소하였으며 공립은 증가하였음						가정	90,939	119,787	148,240	184,598	236,843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비교〉 (단위: 명)						부모협동	미분류	미분류	1,238	1,389	1,655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2002년 대비 약 46.7% 증가함					
유치원	550,256	541,713	545,812	537,822	538,587	-법인 제외한 각 설립형태별 취원아 수가 모두 증가함					
보육시설	800,991	930,252	1,040,361	1,091,287	1,175,049	(특히 2010년 가정 보육시설은 2002년 대비 약 160% 증가함)					

4) 육아정책연구소(2011), 유아교육·보육 주요 통계, p.18~39. (인력(교사) 부문 중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임금수준 표 제외)

5) '0~19세 연령별(전국) 추계인구(2008~2010년)'와 '연도별 유치중등교육 학생 수(2008~2010년)' 참조

〈유치원 취원율〉 (단위: 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만3세	취원아 수 77,669	93,005	99,499	100,406	111,482
	취원율 15.8	19.7	22.9	22.4	25.1
만4세	취원아 수 170,652	170,726	184,178	185,195	181,441
	취원율 34.5	34.6	38.9	42.6	41.5
만5세	취원아 수 297,491	277,819	254,145	251,760	244,654
	취원율 53.2	56.2	51.6	53.2	54.7

-취원율 증가폭 : 만3세 > 만4세 > 만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명, %)

연령	취원 대상아 수	이용 인원 및 이용률						미이용인원 및 미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총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221,496	19.0
만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136,628	27.7
만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84,868	18.9
만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39,455	9.1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 (단위: 명)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	18.5	17.9	17.0	15.5	14.8
국립	17.8	16.8	14.1	12.5	12.4
공립	18.7	18.4	15.7	14.0	14.3
사립	18.5	17.8	17.4	16.0	14.9

-2002년 18.5명에서 2010년 14.8명으로 약 20% 수준 감소함  
-국립에 비해 공립과 사립이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많은 편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비교〉 (단위: 명)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유치원	18.5	17.9	17.0	15.5	14.8
보육시설	10.5	7.9	7.7	6.8	6.3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만0세	취원아 수 46,531	68,908	99,245	107,525	125,132
	취원율 10.5	15.3	22.2	24.3	28.6
만1세	취원아 수 102,473	122,663	160,320	198,831	229,486
	취원율 22.7	27.9	36.0	44.8	52.2
만2세	취원아 수 201,111	222,258	242,324	268,038	331,637
	취원율 42.2	49.5	55.3	60.3	75.0
만3세	취원아 수 221,529	237,919	229,424	227,966	243,264
	취원율 45.1	50.0	51.1	52.1	54.8
만4세	취원아 수 219,974	207,305	192,668	193,934	180,542
	취원율 41.6	42.3	40.5	43.3	41.3
만5세	취원아 수 198,631	179,562	175,323	152,380	149,278
	취원율 33.7	34.0	35.8	32.1	33.4

-만0~3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임  
-이용률 : 만2세(75%) > 만3세 > 만1세 > 만4세 > 만0세(28.6%)

〈보육시설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단위: 명)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	10.5	7.9	7.7	6.8	6.3
국공립	11.9	10.1	9.4	8.9	8.5
법인	10.3	10.6	9.5	8.9	8.4
민간	12.0	8.0	8.8	7.9	7.3
직장	9.9	8.1	7.3	6.5	6.3
가정	6.1	5.3	4.3	4.0	3.9
부모협동	미분류	미분류	5.7	5.4	5.4

-2002년 10.5명에서 2010년 6.3명으로 약 42% 수준 감소함  
-영·유아 연령별로 교사 1인당 아동수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차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시설 수

〈유치원 수〉 (단위: 개원)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	8,343	8,246	8,290	8,344	8,388
국공립	4,240	4,328	4,460	4,483	4,501
사립	4,103	3,918	3,830	3,861	3,887

-보육시설에 비해 전체 기관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사립의 수가 감소하고 국공립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유치원·보육시설 기관 수 비교〉 (단위: 개소)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유치원	8,343	8,246	8,290	8,344	8,388
보육시설	22,147	26,903	38,233	32,149	35,550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	22,147	26,903	38,233	32,149	35,550
국공립	1,330	1,349	1,643	1,769	1,917
법인	1,633	1,537	1,475	1,482	1,470
민간	11,046	13,191	13,930	14,127	14,368
직장	199	243	298	335	370
가정	7,939	10,583	11,828	14,375	17,359
부모협동	미분류	미분류	59	61	66

-2002년 대비 전체 보육시설 13,403개 증가함(60.5% 증가)  
-법인 제외한 각 설립형태별 시설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3. 시간 연장형 프로그램

〈유치원 종일제 현황〉 (단위: 명, 개, %)							〈시간연장형 보육 현황〉 (단위: 명, 개, %)								
시도	취원아 수	종일제 유아 수	종일제 이용률	유치원 수	종일제 운영 유치원 수	종일제 운영 운영률	시도	시설이용 영·유아 수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 수	보육 시설 수	시간연장 보육시설 수	시간 연장 운영률			
								저녁 시간	야간	24시간	휴일				
계	593,746	199,808	43.1	8,202	7,835	95.5	계	1,150,562	26,486	58	1,097	2,296	35,259	6,140	17.4
경기	137,155	41,616	35.4	1,893	1,829	96.6	경기	280,767	5,277	10	272	421	10,372	1,267	12.2
서울	79,704	19,934	24.4	861	794	92.2	서울	186,216	4,399	32	325	353	5,685	1,036	18.2
부산	36,652	15,516	22.7	362	361	99.7	부산	60,654	1,263	2	106	96	1,653	304	18.4
대구	27,570	9,125	52.1	299	298	99.7	대구	55,995	993	2	36	59	1,492	246	16.5
인천	31,858	7,486	28.7	366	364	99.5	인천	57,858	1,189	-	53	60	1,760	276	15.7
광주	73,370	7,378	41.9	235	235	100.0	광주	44,897	735	1	23	95	1,149	134	11.7
대전	20,899	7,029	6.0	233	189	81.1	대전	37,861	1,324	-	19	54	1,393	311	22.3
울산	15,978	4,516	31.9	180	179	99.4	울산	23,878	391	3	24	41	654	97	14.8
제주	4,988	2,836	56.9	110	109	99.1	제주	23,331	1,143	-	4	362	499	194	38.9

- 전국 유치원의 95.5%가 유치원 종일제 운영하고 있음  
 -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취원아 수의 43.1%임  
 - 종일제 이용률과 운영률 모두 대전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전국 보육시설의 17.4%가 시간연장형 보육 운영하고 있음  
 -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은 전체 시설이용 영·유아 수의 2.6%임  
 - 시간연장형 이용률과 운영률 모두 제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4. 인력(교사)

〈유치원교사 수〉 (단위: 명)						〈보육교사 수〉 (단위: 명)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	29,673	30,206	32,096	34,601	36,461	전체	76,075	117,142	134,717	158,727	185,901
국립	15	16	18	20	19	국공립	8,719	10,666	12,219	13,754	15,331
공립	6,384	6,710	7,719	8,462	8,808	법인	13,740	12,844	12,626	12,848	13,359
사립	23,274	23,480	24,359	26,119	27,634	민간	37,930	69,719	73,254	82,955	92,697
						직장	886	1,459	1,979	2,529	2,990
						가정	14,800	22,454	34,423	46,386	61,218
						부모협동	미분류	미분류	216	255	306

- 2002년 대비 유치원교사는 약 23%, 보육교사는 약 144% 증가함

〈유치원교사 학력 현황〉 (단위: %)							〈보육교사 학력 현황〉 (단위: %)						
구분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구분	고졸	대졸			대학원졸	계(수)
		2년제	3년제	4년제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전체	0.1	22.1	28.7	35.2	13.9	100.0 (36,461)	전체	13.5	67.6	17.6	1.3	100.0 (131,835)	
국립	0	0	0	26.3	73.7	100.0 (19)	국공립	5.9	67.3	25.0	1.8	100.0 (14,410)	
공립	0.1	11.9	1.6	54.1	32.3	100.0 (8,808)	법인	5.1	72.1	21.3	1.5	100.0 (13,312)	
사립	0.1	25.4	37.3	29.2	8.0	100.0 (27,634)	법인외	8.9	67.2	21.8	2.1	100.0 (5,824)	
							민간개인	14.2	69.7	15.0	1.1	100.0 (68,834)	
							직장	2.7	56.8	37.7	2.8	100.0 (2,711)	
							가정	21.3	62.4	15.4	0.9	100.0 (30,525)	
							부모협동	11.4	58.4	27.9	2.3	100.0 (219)	

- 분포 : 4년제졸 > 3년제졸 > 2년제졸 > 대학원졸 > 고졸  
 - 사립에 비해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학력이 높음

- 분포 : 전문대졸 > 4년제 > 고졸 > 대학원졸  
 - 전반적으로 국공립, 직장, 부모협동 보육시설의 교사 학력이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직장)

〈유치원·보육 교사의 학력〉 (단위: %)				
구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졸
유치원	0.1	22.1	35.2	13.9
보육시설	13.5	67.6	17.6	1.3

6) 행정안전부(2011), 201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결정.

〈유치원 교사의 임금수준 <sup>6)</sup> 〉 (2011년 기준, 월지급액, 단위: 원)								〈보육교사의 임금수준 <sup>7)</sup> 〉 (2011년 기준,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243,700	11	1,631,400	21	2,370,400	31	3,272,900	1	1,392,280	12	2,009,400	24	2,624,220
10	1,590,300	20	2,291,700	30	3,178,000	40	4,085,600	6	1,677,840	18	2,312,850	30	2,879,340

## 5. 재정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영·유아 1인당 예산 비교〉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아교육	637,790	824,220	947,754	1,012,089	1,235,852	1,529,272	유아교육	1,178	1,510	1,750	1,882	2,300	2,829
보육	1,595,613	2,038,102	2,680,016	3,308,840	4,081,092	4,943,503	보육	1,715	2,059	2,276	3,008	3,594	4,207
-유아교육 예산은 보육예산의 31% 수준임 -유아교육과 보육은 2005년 대비 각각 2.5배, 3배만큼 예산 증액됨							-유아교육과 보육은 2010년 기준 각각 2,829천원, 4,207천원임 (2005년 대비 증액 폭은 각각 140%, 145%임)						

## 6. 정책 추진배경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

- 영·유아 보육에 대한 투자·지원 부족 ⇒ 영·유아 공보육, 공교육 체제 구축
  - 국가 지원과 개인 부담의 합리적인 조화,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 시설 부족 ⇒ 영·유아 보육과 교육 시설 확충, 접근성 제고
  - 국공립 보육시설 부분 확충과 민간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병행
- 종일반 에듀케어 프로그램, 야간 돌봄 프로그램의 내실화, 맞춤형 지원 확대
- 보육, 유아교육 시설·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교육력 제고 대책 필요
- 민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 유아교육의 사교육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 필요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관리체제 개편

7) 중앙보육정보센터(2011),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IV. 정당 영·유아정책 공약과 정책 검토

### 1.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 이명박 후보의 새해 희망디딤돌 7대 프로젝트

##### 희망 디딤돌 1: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 임신과 분만 케어
  - 임신 전후 과정에서 산전 검사 등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 분만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실시
  - 보육시설 미 이용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이용금액 지원  
2009년도 하위 60%, 2010년도 하위 70%, 2011년도 하위 80%, 2012년도 100%
-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 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
- 빈곤층 자녀를 위한 드림 스타트(DREAM START)의 전국적 시행

### 2. 이명박 정부의 실제 영·유아 보육·교육지원정책

####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11)

- 비전
  -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

○ 정책목표

-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표 17〉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주요 정책 분야 및 핵심과제

정책 분야	핵심 과제
유아학비 부담경감	①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②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③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④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⑤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①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②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④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⑤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②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③ 다양한 심화·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④ 지역단위 공·사립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 ⑤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우수 교원 배치·활용	①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장학 지원 ③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④ 우수 교사 발굴·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⑤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③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연계 강화 ④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⑤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나. 정부의 ‘만5세 공통교육과정’ 발표(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1.5.02)

○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

-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

-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 학습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표 18〉 현행과 달라지는 점 대비표

구 분	현행	향후
교육 과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유아교육, 보육</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유치원교육과정</li> <li>-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공통과정 일원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li> <li>- 기본소양과 인성내용 강화</li> <li>- 초등 1·2학년군과 연계 강화</li> </ul>
담당 기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유치원, 어린이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 유치원</li> <li>- 보육: 어린이집</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현행 유지</div>
교사 자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유치원교사, 보육교사</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유치원 정교원 1·2급</li> <li>- 어린이집: 보육교사 1~3급</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현행 유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유치원 교원 1·2급</li> <li>- 어린이집: 보육교사 1·2급 (일부 지역 3급교사)</li> </ul>
지원 대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소득하위 70%</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학비: 소득하위 70%</li> <li>- 어린이집 보육료: 소득하위 70%</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순 계층</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학비·보육료 : 순 계층</li> </ul>
지원 단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월 17.7만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월 30만원으로 인상</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20만원 → ('14) 24만원 → ('16) 30만원</li> </ul>
재원 부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국비-지방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학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li> <li>- 어린이집 보육료: 국비-지방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지방교육재정교부금</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학비·보육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li> <li>- 만 5세아 보육료 절감재원: 4세 이하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현대화 등으로 활용</li> </ul>
관리 체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li> <li>- 어린이집: 보건복지부(지자체)</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현행 유지</div>

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지원 사업<sup>8)</sup> (2011년 기준)

□ 자녀성장맞춤지원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확대(만 0~5세)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4인가구 기준)의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함<sup>9)</sup>
-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제외한 후 합산하여 지원 더욱 확대함

○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173만원이하, 4인가구 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12개월 : 20만원, 12~24개월 : 15만원, 24~36개월 : 10만원)

○ 육아 휴직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던 정액제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지급방식을 바꿔 최고 100만원까지 확대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제 실시함
- 공공형 어린이집<sup>10)</sup> 시범사업 실시

8) 보건복지부(2011), 행복한 우리아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9)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구분	지원대상	3인	4인	5인	6인
만0세~만5세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어린이집 경우 정부지원 기준단가(월) (2011년 기준)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지원단가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	19만 7천원	17만 7천원	

※ 만0세(2010.1.1 이후 출생), 만1세(2009년생), 만2세(2008년생), 만3세(2007년생), 만4세(2006년생), 만5세(2005년생)

- 유치원 경우 정부지원 기준단가(월) (2011년 기준)

대상	소득수준	지원율	연령	국공립	사립
만4~5세아	소득하위 70% 이하	100%	만4~5세	59,000원	177,000원
만3세아		100%	만3세	59,000원	197,000원
종일반비		100%	만3~5세	30,000원	50,000원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는 종일반비도 지원함(국공립 월 30,000원, 사립 월 50,000원)

10)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결과 등이 우수한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육시설을 말함

○ 아이돌보미 지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을 차등 지원함
-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영·유아가구 월평균소득 하위 70%이하 가구(480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영아 종일제 돌봄비용 지원. 3개월~12개월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월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신청 가능

□ 맞벌이부부 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 직장보육시설 설치 가능 층수 및 인근늘이터 인정기준을 완화함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다자녀 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다자녀 추가 공제, 둘째아 이상 고교 수업료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우대 카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가구별 맞춤 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
- 2011년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
- 농어업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보육시설 이용 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미이용 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35%(2012년 60%까지 확대) 지원 등

라. 공약과의 핵심적인 차이점

-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래는 미실현
-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미실현(현재 만 5세아만 계획)

- 보육시설 미 이용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이용금액 지원 미실현
  - \*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20만원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미실현
  - 실현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정된 인근병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에서 5세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 2~5세) 및 구강검진 3회(2, 4, 5세) 실시

### 3. 야당의 영·유아 보육·교육지원정책

- 야당(민주당, 2011)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입장<sup>11)</sup>

기조	- 「3+1」(3무 1반) 정책 :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 「3+3」정책 :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	---



정책	구분	내용																																																
	정책 목표	① 만5세 이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하여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하여 무상보육 실현 ② 시설 미이용 아동의 경우, 만2세 이하·차상위까지 지원되는 양육지원수당을 만5세 이하 아동 모두에 지원 ③ 국공립 보육·교육시설을 현행 20%(영·유아 인원대비)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공성 강화 ④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무상 보육	연차별 추가 소요 재원 규모	< 연도별 무상보육 추가재정소요 추계 > (단위: 억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2013</th> <th>2014</th> <th>2015</th> <th>2016</th> <th>2017</th> </tr> </thead> <tbody> <tr> <td>민주당 무상보육 예산 총소요(A)</td> <td>99,102</td> <td>101,001</td> <td>102,335</td> <td>103,646</td> <td>104,998</td> </tr> <tr> <td>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설치</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r> <tr> <td>보육 및 교육비 확대 지원</td> <td>80,318</td> <td>82,795</td> <td>84,508</td> <td>86,205</td> <td>87,938</td> </tr> <tr> <td>양육수당 확대 지원</td> <td>13,784</td> <td>13,206</td> <td>12,827</td> <td>12,442</td> <td>12,059</td> </tr> <tr> <td>무상보육 관련 MB정부 지원 추계(B)</td> <td>61,916</td> <td>63,703</td> <td>64,384</td> <td>64,997</td> <td>64,213</td> </tr> <tr> <td>민주당 무상보육 예산 추가소요(A-B)</td> <td>37,186</td> <td>37,298</td> <td>37,951</td> <td>38,649</td> <td>40,785</td> </tr> <tr> <td>추가재원 중 국비부담분</td> <td>24,735</td> <td>24,877</td> <td>25,353</td> <td>25,832</td> <td>27,201</td> </tr> </tbody> </table> ※ 올해 1월 발표시 '무상보육' 추가소요재원: 4.1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민주당 무상보육 예산 총소요(A)	99,102	101,001	102,335	103,646	104,998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설치	5,000	5,000	5,000	5,000	5,000	보육 및 교육비 확대 지원	80,318	82,795	84,508	86,205	87,938	양육수당 확대 지원	13,784	13,206	12,827	12,442	12,059	무상보육 관련 MB정부 지원 추계(B)	61,916	63,703	64,384	64,997	64,213	민주당 무상보육 예산 추가소요(A-B)	37,186	37,298	37,951	38,649	40,785	추가재원 중 국비부담분	24,735	24,877	25,353	25,832	27,201
	2013	2014	2015	2016	2017																																													
민주당 무상보육 예산 총소요(A)	99,102	101,001	102,335	103,646	104,998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설치	5,000	5,000	5,000	5,000	5,000																																													
보육 및 교육비 확대 지원	80,318	82,795	84,508	86,205	87,938																																													
양육수당 확대 지원	13,784	13,206	12,827	12,442	12,059																																													
무상보육 관련 MB정부 지원 추계(B)	61,916	63,703	64,384	64,997	64,213																																													
민주당 무상보육 예산 추가소요(A-B)	37,186	37,298	37,951	38,649	40,785																																													
추가재원 중 국비부담분	24,735	24,877	25,353	25,832	27,201																																													

### 4. 현재 한나라당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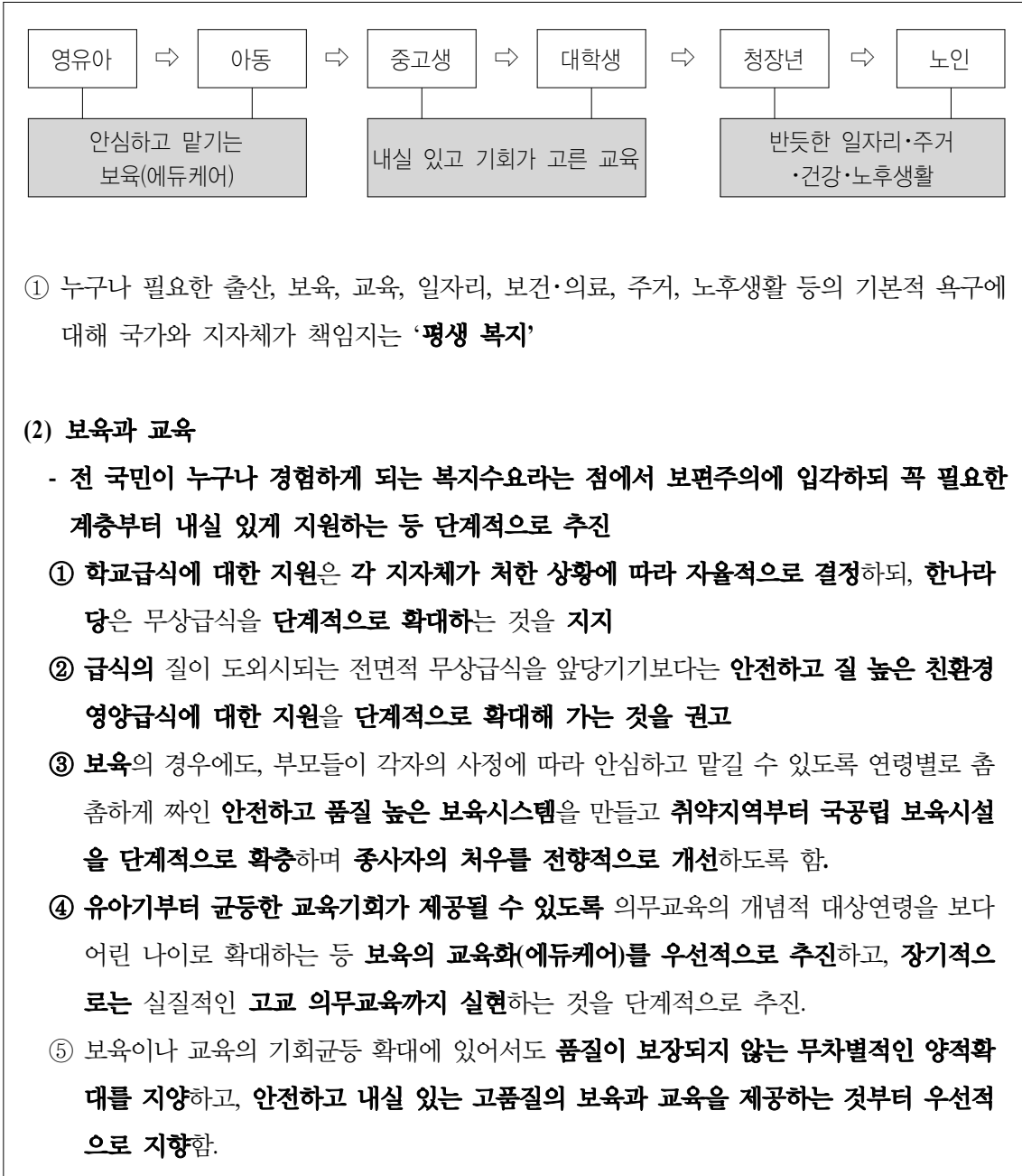
□ 여의도 연구소 뉴비전(2011.07.20.) :

“맞춤형 영·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1) 민주당 홈페이지(<http://www.minjoo.kr>)- 정책광장- 정책자료실- 복지보고서

- 0세~5세 영·유아의 보육·교육 무상지원
    - ※ 1단계 : 0세~2세 영아보육료, 5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 ※ 2단계 : 3세~4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 보육시설 미(未)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 영·유아 보육·교육 교사의 처우 개선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발언(2011.08.07.)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0~4세 영·유아 보육·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우선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면 늦어도 3~4년 내엔 (0~4세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겠느냐.”
  - “0세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해도 예산은 1조원 미만으로 들 것”, “(4세까지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
    - ※ **황우여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당내 일부 인사와 외부 일부 언론도 비판**
    - “무상보육은 해당행위”라는 비판까지 제기
- ‘한나라당의 복지비전과 복지정책(안)’(2011.10.06)
- 한나라당 「The 좋은 복지TF」가 ‘한나라당의 복지비전과 복지정책(안)’ 수립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과 관련한 내용

- (1)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
- 1단계: 육아종합정책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 2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 (내실 있고 기회가 고른 교육)
  - 3단계: 일자리와 주거 보장
  - 4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



-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개념적 대상연령을 보다 어린 나이로 확대 ⇒ 무상 보육·교육, 공교육·공교육 체제 구축 의지로 해석
-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고품질의 보육·교육 제공 ⇒ 보육·교육 질 관리, 교육력 제고
- 취약지역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단계적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확대 민간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 종사자 처우를 전향적으로 개선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 서울시장 선거(2011.10.26.)에서 나경원 후보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공약

- 목표 : 아이가 즐겁고 어른이 안심하는 내 집 같은 보육환경

“365일 24시간 안심보육 서비스”

-어머니의 꿈을 실현하는 ‘맘드림’ 보육서비스-

- (책임보육) 영아전용(0~2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안심보육)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맞춤보육) 육아품앗이, 친인척 돌봄서비스 실시
- 보육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아쉬움 : ‘한나라당의 복지비전과 복지정책(안)’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함

□ 한나라당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정책 현주소

- 영·유아 보육·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에 대한 혼란 정리 미흡
  -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무의사결정 상태 유지, 내부 갈등 확대
- 정책방침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The 좋은 복지TF」가 작성한 ‘한나라당의 복지비전과 복지정책(안)’이 관철되지 않았음
- 정치적 지향 등의 차이로 정책 쟁점에 대해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부각
-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만 하는 정책방침으로는 국민의 요구 수렴에 한계
-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만 하는 정책방침으로는 국민의 고통 해결에 한계
- 정치인들은 ‘권력의 선택’을 받기보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 V.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방향<sup>12)</sup>

### 1. 비전과 목표

- 비전 :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세상  
(국가가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영·유아 맞춤형 공보육·공교육 체제 실현)
- 목표 :
  - 영·유아를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 : 0세~5세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 서민·중산층 가정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 체제 구축
  -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시설 접근성 제고와 안전하고 고품질의 보육·교육 실현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력 신장
  - 영·유아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체제 개선

### 2. 추진 방향

#### 1 0세~4세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

##### 1) 배경 및 목적

- 높은 교육열과 조기 교육 열풍으로 유치원 교육비용과 함께, 유아영어교육비용 등 기타 사교육비까지 계속 증가하고, 그러한 보육·교육 비용 증가는 출산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유아교육 관련 주요 지표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어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시급함
  - \* 정부 지원없이 보육료로 필요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대다수의 아동들이 보육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은, 별도의 비용

12) 이 정책방향은 여의도연구소 뉴비전(2011)의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책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을 부담해야하는 특별활동 비용의 추가로 인해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여진, 2011).<sup>13)</sup>

- 향후 초·중등 학생수 감소 추이 : 향후 10년 간 연평균 19만 3808명 감소 추정 ⇒ 영·유아 무상 보육과 교육을 위한 재정 여유 확보 가능성
- \* 현재 만 0세~5세아는 각 연령별로 평균 44만 명, 연차적으로 무상 보육·교육 시행 시 추가되는 지원 대상 아동수는 연간 약 13만~14만 명 추정

## 2) 정책 방향

- 0세 ~ 4세 영·유아 보육·교육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지원
  - \* 만 5세아는 2012년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개념적 대상연령을 보다 어린 나이로 확대

## 3) 정책 내용

- 2012년에 예정된 만 5세아에 이어, 0세 ~ 4세 영·유아를 기준으로 표준보육과정,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를 해당 연령대 영·유아 부모에게 단계적으로 지원
- 1단계 : 0세 ~ 4세 농어촌 영·유아 보육·교육 무상 지원
- 2단계 : 0세~2세 영아보육료 무상 지원
- 3단계 : 3세~4세 유아교육비(보육비 포함) 무상 지원
- \*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확대하여 5년 내 정책 실현
- 만 3세 ~ 5세 유아의 보육과 교육 기관을 단계적으로 기준 심사를 거쳐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운영
- 기존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된 만 3세 ~ 5세 유아의 보육과 교육 관리시스템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관리·운영

13) 이여진(2011).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77호.

## 2 보편적 국가 지원과 맞춤형 국가지원의 조화 실현

### 1) 배경 및 목적

- 현재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상위계층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서민 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은 미흡한 상태
- 부모의 42.7%가 유아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자녀의 추가 출산 포기(차성현, 2011)

### 2) 정책 방향 :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의 조화

- 보편적 지원 : 0세 ~ 5세 영·유아 표준(기본)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완전무상 보육·교육 실현
- 맞춤형 지원 : 저소득층·서민계층 0세 ~ 5세 영·유아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교육 추가지원 실현(저소득층·서민 자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 3) 정책 내용

- 2012년에 예정된 만 5세아에 이어, 연령별로 0세 ~ 4세 영·유아 공통(기본) 보육·교육과정 보육·교육비를 산출하여 전액 국가에서 지원
- 저소득층·서민계층 0세 ~ 5세 영·유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 방과 후와 방학 중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저소득층·서민계층 0세 ~ 5세 영·유아 아동 추가 지원
  - 방과 후와 방학 중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저소득층·서민계층 0세 ~ 5세 영·유아 아동 추가 지원
- 취업모 자녀가 시간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추가 지원
- 종일제 돌봄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확대

### 3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맞춤형 양육수당 지급

#### 1) 배경 및 목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태임
  - \* 현재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173만원이하, 4인가구 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12개월 : 20만원, 12~24개월 : 15만원, 24~36개월 : 10만원)
- 특히 보육시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가구가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2) 정책 방향

- 모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에게 양육수당 지원
- 저소득층·서민 아동, 교육소외지역 아동에게 더 많은 양육수당 지급

#### 3) 정책 내용

-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까지 확대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
  - 가구 소득수준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 하여 저소득층·서민 가구의 어린 아동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실현
- 1단계 : 농어촌 0세~3세 영아 지원 확대
- 2단계 : 전체 0세~3세 영아 지원 확대
- 3단계 : 4세 유아 지원 확대

#### 4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병행, 질 관리체제 개선

##### 1) 배경 및 목적

-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지나친 민간 의존)으로 인한 부모들 불만 증대
  - \*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중 89.7%는 넓은 의미에서의 민간어린이집이며<sup>5)</sup>, 국공립어린이집은 1990년에 전체의 18.8%였으나, 2010년에 5.3%까지 감소하였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의 5%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이여진, 2011).
-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강력하고 절실한 요구 존재
- 출산률 저하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의한 민간 보육시설의 불만 존재
- 직장어린이집 부족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 57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340개소(59.0%)로 의무 미이행율이 41%에 달함(이여진, 2011)

##### 2) 정책 방향

- 질 높은 보육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병행 추진

##### 3) 정책 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을 일정 비율(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병행
  - 공공형 어린이집<sup>14)</sup>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 감독 및 평가 강화
  -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제 더욱 내실화함
  - 아동 연령별 정원 관리,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업무시간 산정에 보육내용 연구·휴식시간 고려, 급여체계 개선), 평가인증과 재정 지원의 연계
-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을 위한 ‘누리교육과정’ 확대

14)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결과 등이 우수한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기준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육시설을 말함

- 보육·교육 질 개선과 교육의 다양화(획일화 방지) 병행 추진
- 직장어린이집 이행조건 강화, 설치 관련 각종 규제 완화

## 5 영·유아 보육·교육에 헌신하는 교사 처우 개선과 교육력 신장

### 1) 배경 및 목적

- 영·유아 교육단계에서 교사의 영향은 다른 연령대 교육보다 매우 크지만 영·유아 교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가 열악함
- 영·유아 보육·교육의 최우선의 과제는 교사들의 열정과 사기를 북돋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임
- 대부분의 보육시설 교사, 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열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직·전직도 잦아 보육과 교육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음

### 2) 정책 방향

- 교사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으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열정 제고
-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 제고
-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 증대

### 3) 정책 내용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을 공립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함. 향후 4-5년 내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 보육교사 임금을 공립유치원 교사 임금 수준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현실화
- 보육교사와 유아교육 교사 양성 시스템 개선으로 교육력이 우수한 교사 양성
- 기존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보수 교육을 통해 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보수와 자격 요건을 점차 개선
-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유아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임

## 6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대책

### 1) 배경 및 목적

- 영어학원 비용 등 영·유아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59.3%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차성현, 2011)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영·유아 영어학원 등 유아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규제 미흡

### 2) 정책 방향

-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지속적 통계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
- 영·유아 영어학원 등 유아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규제 강화

### 3) 정책 내용

- 통계청,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협력하여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지속적 통계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 영·유아 영어학원 등 유아사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 관리, 규제 대책 강화
- 영·유아 사교육비 등 주요 사교육비 관리·규제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를 담당하도록 관리 시스템 변경
  - 영·유아 영어학원 등 유아사교육 교습비 기준 제정하여 적용
- EBS를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 보육교사·유치원교사가 아동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아영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확대
  -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에 쓰일 동영상 콘텐츠를 EBS와 함께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보급
  - 특히, 보육·교육기관 종일반용과 가정용 영어교육, 한글교육, 역사이야기 콘텐츠 등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개발·보급



## 7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와 재정 지원체계 개선

### 1) 배경 및 목적

- 현재 여러 선진국들은 영·유아단계의 교육적 준비가 이후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포함시키고,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대부분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 간 중복된 기능을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연령별로 이원화하여 조정함
-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성과 보육의 질 개선 요구 증대
- 초·중등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대적인 여유

### 2) 정책 방향

- 보육과 유아교육을 ‘영·유아기교육’ 개념으로 점차 대체
-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체계 재정비, 재정 투자 확대
- 보육시설과 유치원(유아교육) 차별성을 인정하면서 유기적인 통합 추진

### 3) 정책 내용

-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 재정 지원 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
  - 향후 만 3세 - 4세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체계 통일(단, 교부율 재산정 필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요
- 보육시설과 유치원(유아교육) 시설의 기능을 각각 인정하면서 유기적인 통합 추진
  - 재정지원체계의 점진적인 통합
  - 교육과정의 점진적인 통합
  - 교사 자격과 보수수준 개선의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통합
- ※ 내년도에 추진될 ‘만 5세아 공통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재정지원, 관리·체계 마련

## Ⅵ. 기대 효과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누리는 행복

※ 영·유아 공보육, 공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이념과 정치를 넘어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 되었음

□ 한나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기대 효과

- 점진적인 출산률 증대
- 생애 초기단계 출발점 평등 실현
-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보육서비스, 유아교육 서비스 실현
- 보육·교육 걱정 없이 출산 증가
-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누리는 행복

□ 모든 정당에 대한 바람

- 국민 행복 증진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정권을 획득하려는 정당은 사회적 가치의 이상적인 분배방식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유아 공보육,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정당들이 과연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기 바람
  - 정당과 정치인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은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음
  - 정당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바꿀 것인지, 국민에 의해 바뀔 것인지 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 아직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함
- 정당, 정치인의 행복이 국민, 부모와 아이들의 행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복임

**부족한 발제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정토론 1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박 숙 자 한국보육진흥원장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영유아를 위한 균등한 보육·교육기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책임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발제자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향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비전이나 목표에는 동의하나, 본 발제문에서 제안한 정책적 대안(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아래의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함.

### 1.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영유아보육(만0-5세 대상)과 유아교육(만3-5세)에 대한 무상지원을 논할 때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유아 무상교육이며(발제문 10쪽) 영아무상보육은 시설보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만0-2세 영아대상의 시설보육은 꼭 필요한 가정에만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봄. (만0-2세 영아기 때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
- 만0-2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가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지급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족 등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대상 확인) 이원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단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만0-2세 영아에 대해서는 누구나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양육수당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가정에서의 일차적인 자녀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금(영아기본보조금+보육바우처)의 상당부분을 미이용아동 양육수당(20만원-10만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원의 일부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금(2011년 현재)

연령	기본보조금(시설)	보육바우처(부모)	정부지원 총액
0세아	361,000원	394,000원	755,000원
1세아	174,000원	347,000원	521,000원
2세아	115,000원	286,000원	401,000원

## 2. 국가가 보육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믿을 만한가?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할 것임.
- 현재는 보육시설의 90%이상이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질관리 차원에서 2005년부터 도입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비율의 60% 정도에 불과함. 그러나 최근 구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도 신뢰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미인증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불신 가중.
- 공보육 체제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서비스 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 \* 현재 공급과잉인 어린이집 수 통제
- \* 평가인증과 바우처 사용 연계
-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질관리체계 구축(인증후 상시 컨설팅 및 불시 확인점검 확대 등)
- \* 신규 어린이집 인가조건 강화
-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관리강화로 국공립에 대한 수요 대처

## 3. 보육서비스의 주체인 보육교직원은 제대로 양성되고 재교육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 2005년부터 보육교직원(1,2,3급 교사 및 원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이 서류전형 과정을 거쳐 발급되고 있음.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의 30% 정도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낮은 처우로 현장에서는 교사 구인난 문제가 심각함. 따라

서 보육교직원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대책 등이 필요함.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취득자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2011.9.30 기준) (단위: 건, 명)

구 분	자격증 발급 건	자격증 취득자* (A)	현직 종사자 (B)	현직 종사 비율 (B/A)
계	828,787	737,136	213,700	29.0%
○ 어린이집 원장	165,887	155,815	39,187	25.1%
○ 보육교사**	662,900	581,321	174,513(100.0)	30.0%
- 1급	309,077	300,728	79,011( 45.3)	26.3%
- 2급	288,873	249,992	78,753( 45.1)	31.5%
- 3급	64,950	30,601	16,749( 9.6)	54.7%

\* 중복 취득 건(승급, 재교부)을 제외한 실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 급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급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8명은 보육교사 1급에 포함됨.

- \*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서비스의 질제고로 직결?
- 개방형 보육교사 양성체계 운영으로 인하여, 특히 2급 교사의 자질문제 심각(현재 전공학과 관련없이 12과목 35학점 이수로 가능, 현재 17과목 51학점으로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중)
- \* 보육교직원의 공급과잉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지정토론 2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유 희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오늘 「한국 보육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안선희 교수님의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선희 교수님은 본 논문에서 유아교육, 보육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들을 의미있게 총망라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정책 분석, 정책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아교육, 보육정책의 발전적 논의는 대체적으로 1) 법·제도적 측면, 2)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 3) 취원 영유아 현황, 4) 교사 현황 및 운용, 5) 유아교육과정 / 보육과정, 6) 재정 혹은 비용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교수님의 논문도 이러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어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중에서 1) 법·제도, 2) 시설 유형, 3) 재정 혹은 비용에 대하여 몇 가지 주로 보육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보태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안선희 교수님의 ‘보육, 유아교육이란 공공서비스이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 1.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

- 유아교육과 보육은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함.
  - 공통점 : 3 ~ 5세 대상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 차이점 : 영유아보육법(복지부 소관)은 영유아 보육에, 유아교육법(교과부 소관)은 유아교육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 법·제도, 기관의 유형 및 명칭, 교사 자격, 교육과정·보육과정, 관리감독체계, 예산 지원 및 비용 운영에서 차이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비용 및 정부보조금 지원체계에서 차이
  - 동일연령인 3 ~ 5세 대상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정부보조금은 동

- 일하게 지원되나 영유아 1인당 비용, 부모부담금, 지원체계가 달라 유치원, 보육 시설 현장에서 혼란
- 유치원은 원비가 자율화 되어 있어 유아 1인당 비용, 부모부담금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유치원은 지원기준 시간이 반일제가 기준이고 종일제 운영시 추가 비용이 지원되거나 추가비용 징수가 가능함. 그러나 보육시설은 동일한 연령의 유아라 하더라도 지원 기준이 종일제이므로 연령별 동일한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비용 운영 자체가 다름.

〈표 1〉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령)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목적	유아교육	영유아 보호와 교육, 가정복지 증진	
대상	3~5세 취학전 아동	0~5세 취학전 아동	
서비스 성격	교육	보호·양육·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시설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	보호자 위탁에 의한 보육 “시설”	
기관(시설) 구분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보육시설	
기관(시설) 설치관련	설치기준: 대통령령	설치기준: 보건복지가족부령	
설립인가(국공립 외)	시·도 교육감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평가/지도감독	유치원 평가	보육시설평가인증	
보육료/교육비 기준	·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교육 비용 달리 적용 · 경영자 자율 조정	·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 수납 · 종일제(상한제)	
지원체계	아이즐거운 카드	i-사랑 카드	
종사자/교직원	원장, 원감, 교사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교원배치 기준	· 관할청이 배치기준 결정 · 시·도 교육감이 결정 3세아 - 1:20 4세 이상 - 1:30	· 시행규칙 0세아 - 1:3 1세아 - 1:5 2세아 - 1:7 3세아 - 1:15 4세 이상 - 1:20	
시설설치 기준	시설 임대	불허	제한 없음
	시설 처분	매도·담보 제공 금지	제한 없음
	설치 위치	1, 2층 원칙	1층 원칙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왔음. 1) 현행 체제를 유지 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2) 0 - 5세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3) 연령별 이원화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 OECD는 영유아 발달 원칙에 따라 0 ~ 5세 통합을 제안하고 있음. 본인 역시 0 ~ 5세 통합을 제안함.
  - 또한 안선희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나타나 있드시 영유아의 인성, 성장과 발달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어릴수록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모든 연령에서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나, 구지 연령별 우선순위를 둔다면 0세, 1세, 2세, 3세 ~ 순으로 더 어린 연령부터 보호되고, 교육되고, 지원이 강조되어야 함.

## 2. 보육시설 유형에 대한 논의

- 보육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38,021개 보육시설중 90.8%(34,519개소)가 민간보육 시설로 이들은 대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도 함(국공립보육 시설 5.3%, 법인보육시설 3.9%).
  - 가정보육 증가가 가장 높고,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의 점유율은 해마다 감소

〈표 2〉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2008	34,993 (100.0)	1,826 (5.5)	1,458 (4.4)	14,275 (42.6)	969 (2.9)	13,306 (39.7)	65 (0.2)	15,525 (46.3)	350 (1.0)
2009	35,550 (100.0)	1,917 (5.4)	1,470 (4.1)	14,368 (40.4)	935 (2.6)	13,433 (37.8)	66 (0.2)	17,359 (48.8)	370 (1.0)
2010	38,021 (100.0)	2,034 (5.3)	1,468 (3.9)	14,677 (38.6)	888 (2.3)	13,789 (36.3)	74 (0.2)	19,367 (50.9)	401 (1.1)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 민간보육시설은 임대율 32.3%, 융자율 20.7%로 53.0%의 보육시설이 임대 및 융자 시설임(2009 보육실태조사). 이들은 보육비용에서 우선적으로 임대료 및 융자금 관련 비용을 지출함. 자가 민간시설들 역시 투자금 대비 이익을 얻고자 함.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그 결과 정부와 보육현장 간의 다양한 마찰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의 공공 보육정책 추진 관점과 보육현장의 민간에 의한 보육사업 추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임.

### 3. 보육재정 및 비용 운용

- 연도별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은 2002년도 8,073억원, GDP 대비 0.118%에서 2010년도 0.463%(4조 9,209억원)로 증가하였음. OECD는 최소한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표 3〉 연도별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국 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2002	보육	2,147	2,264	4,411	0.065
	유아교육	208	3,348	3,556	0.052
	노동부	106		106	-
	계	2,461	5,612	8,073	0.118
2005	보육	6,004	10,046	16,050	0.198
	유아교육	966	5,512	6,478	0.080
	노동부	151		151	-
	농업인양육비	448		448	0.006
	계	7,345	15,558	23,127	0.285
2008	보육	14,678	15,300	29,978	0.317
	유아교육	2	10,119	10,121	0.107
	노동부	174		174	0.002
	농업인양육비	988		988	0.010
	계	15,842	25,419	41,261	0.437
2009	보육	17,104	18,782	35,886	0.338
	유아교육	1	12,352	12,353	0.116
	노동부	158		158	0.001
	농업인양육비	812		812	0.008
	계	18,075	31,134	49,209	0.463

자료: GDP-8,480,446억원(2006), 9,011,886억원(2007), 9,444,457억원(2008), 10,630,590(2009) 한국은행.  
2002 - 2005년 :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2006 - 2009년 : 국무총리실 내부자료. 2010년 :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수산물부, 지방자치단체 2010년 예산안 자료

□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과 미지원 보육시설간 <표 4>와 같은 차이가 있음.

<표 4>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2009)

단위: 원(%)

구분	인건비지원 (국공립·법인)			인건비미지원(민간)			국공립대비비율
	보육료	인건비	계	보육료	기본보육료	계	
1세미만아	383,000	460,241	843,241	383,000	350,000	733,000	86.9
만1세아	337,000	285,592	622,592	337,000	169,000	506,000	81.3
만2세아	278,000	210,743	488,743	278,000	112,000	390,000	79.8
만3세아	191,000	56,366	247,366	243,000		243,000	98.2
만4세이상	172,000	48,179	220,179	238,000		238,000	108.1

주 : 인건비지원시설(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산출은 정부기준 보육료와 보육교사 5호봉 인건비, 시설장 인건비 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 인건비미지원시설(민간, 가정)은 서울시기준 민간시설 보육료, 기본보조금 적용. 취사부 및 기타인력 인건비는 미적용.

- <표 4>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 대비 민간보육시설의 비용이 86.9%에서 108.1%이므로 모든 세부 운영 역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함.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인건비 역시도 86.9%에서 108.1%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발표자의 월고에서도 나타나 있드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보육시설의 61.2%에서 72.2% 수준으로 비용 운영에 문제가 있음.

<표 5> 초임 교사 평균 연봉('08)

유치원		보육시설		
국·공립(a)	사립(b)	국·공립(c)	민간(d)	가정(e)
2,367만원	1,451만원	1,529만원	1,104만원	936만원
	61.3%(b/a)		72.2%(d/c)	61.2%(e/c)
			46.6%(d/a)	39.5%(e/a)

#### 4. 유아교육, 보육 운영 대안 1

- 유아교육, 보육이 국가 책임이라는 점은 유아교육, 보육에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 확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임. 현재 부모들은 본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종일반, 반일반을 원하는대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그리고 비용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징수되고 있음<sup>15)</sup>.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현실적으로 통일하여 오후 2 ~ 3시에 귀가하는 이용시간 유형(가칭 반일반)과 오후 7시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가칭 종일반), 시간연장형으로 구분하고, 비용 운영을 현실화할 때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특히 종일제 이용은 부모의 취업이나 직업교육, 또는 가정에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예를 들면 병환자등)이 있어서 아동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함.<sup>16)</sup>
  - 비용 분담은 현재와 같은 비용 지원체계를 일부 조정하되 종일반에는 추가 교사를 배치하고 인건비 지원 등으로 현재 유치원 운영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중 한명이 낮시간 동안 자녀양육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후 2 ~ 3시에 귀가하는 반일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 조건	교사배치	비용
반일반 (오후 2~3시 퇴원)	조건 없음	영유아대 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담임교사 배치	반일반 비용
종일반 (오후 7시전후 퇴원)	맞벌이가정등 낮시간 동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로 제한	담임교사이외에 종일제 비담임교사, 반일제교사 등 추가교사 배치	종일반 비용
시간연장 (저녁 10시 전후 퇴원)	부모의 맞벌이 유형을 살펴보아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시간연장보육교사 배치	시간연장 비용

15) - 보육사업안내에 의할 때 보육시설에서의 반일반 제도라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반일반 비용이라는 개념도 없음. 그러나 보육현장에서는 반일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종일반 비용, 반일반 비용이 구분되어 징수되고 있기도 함. 종일반, 반일반 비용이 다르다는 점은 점검되어야 함.  
 - 유치원은 현행 원비가 반일반 기준으로 종일반 운영시 종일반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거나 혹은 별도 징수됨.

16) 보육시설 이용영유아중 취업모자녀는 41.8%임(2009 보육실태조사 p. 164).



• 지정토론 3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

이 재 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여의도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한국보육의 미래**



여의도연구소

(150-8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번지 기계회관 신관 3층  
Tel. 02-2070-3300~8